

국제 경쟁시대의



전 상 호
농심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

금년만큼 경제적으로 사건 및 사고가 많은 해는 근대사에 없었던 것 같다. 신년 벽두부터 대대별 그룹이 부도가 나서 세인을 놀라게 하더니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부도사태가 꼬리를 이어 이제는 접보를 해도 덤덤한 심정이 될 정도이다. 사계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차입경영, 수요초과 시대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핵심 경영역량 내부 축적 등한,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 실패 등이 원인일 것이다.

반면, 그런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보산업은 성장세를 유지하여 금년말에는 S/W 산업만도 총생산액이 국내 총생산액(GDP)의 1%를 넘어설 전망이다라고 한다. 아마 국가의 지속적인 정보산업 육성정책 및 기업에서의 정보기술 응용에 대한 인프라로서의 인식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산업의 양적인 성장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경쟁력을 갖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가경제의 인프라로서 혹은 독립된 산업으로서 부가가치 창출을 동반한 실질적 성장인가? 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답습한 성장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져보게 된다. 이런 의문에 대해 몇가지 객관적 사실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을 구해 보고자 한다. 얼마전 한 컨설팅 업체가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수준을 선진국을 대상으로 벤치마크하여 비교 평가한 일이 있다. 동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대비 5년 내지 10년은 뒤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화 백서에도 우리의 정보화 지수를 미국의 1/7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체감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기술영역에 있어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시말해 정보화의 확산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는 상당부분 외국이 가져가고 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대형 SI 업체의 매출구조를 보면 아직 그룹 내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저런 자문자답을 통해 두가지 생각을 갖게 된다. 하나는 우리의 정보산업은 아직 성장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여러가지 면에서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보면서 성장기에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 모두는 몇가지 점에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우선은 기업의 내재가치 배양에 중점을 두는 즉 기업이 창출해 내는 상품 및 서비스가 근본적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경영을 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과거 수요초과의 시장환경과 국가내 제한적 경쟁 및 정부의 지원이라는 환경에 익숙해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성장위주의 경영전략이 왕도였을지도 모른다. 필요한 자금은 기업이윤의 재투자보다 외부 차입이 훨씬 효과적 방법이었을 것이다. 기술의 개발보다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기업비용을 절감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비교적 저임금의 풍부한 인력시장은 기업내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반감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되어 더 이상 수요초과의 환경은 기대하기 어려워, 경제에 있어 국가는 특정기업에게 특별한 역할을 해줄 수가 없게 되었고, 외부차입은 기업의 원가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술도입은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작용하는 환경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살아 남기 위해서 오직 어떤 환경에서도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생력만이 기업 생존의 필요충분 조건인 환경으로 변화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경영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배양하겠다는 매니지먼트 패러다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 과제들

한편, 정보산업에 있어 우리의 기업들이 팔목할 만한 외형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성장의 원인을 냉철한 시각으로 성찰해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혹시 계열사가 보장해 주는 이윤을 바탕으로 외부사업에서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국의 상품 및 기술을 먼저 발굴하여 국내에 보급한 대가로 얻어진 성장은 아닌지, 단순히 인력 투입의 대가만을 취한 성장은 아닌지, 제공하는 용역은 고객에게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상기 몇가지 자문에 대한 확실한 자신이 없다면 이제라도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전산업 인프라가 되는 산업으로서 부가가치 창출력 배양을 지향한 경영전략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인력'에 대한 시각변화의 필요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리 자동화가 된다고 해도 기업에게 있어 사람은 주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기술도 사람이 개발하는 것이며 적용 및 발전도 사람에 의해서 가능한 영역인 것이다. 사실 그간 우리는 인력의 양성 그것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력양성에 최우선을 두는 경영을 해 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성과란 경영의 3대 요소중 나머지 두 요소를 사람이 운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치인 것이다. 이렇듯 기업의 중요한 자산인 사람의 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적합한 Contents(Vision, Strategy, Structure, Skill 등)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Motivation 및 Ability를 부여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어떻게'를 습관적으로 답습하는 구태를 버리고 항상 'Why'라는 자문으로 행위의 근본적 목적을 확인하는 사고를 견지하여 기업경영의 체계를 재정비해서 인재 육성, 경쟁력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이 아직도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요인중에 하나는 정보산업 종사자들의 수준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현상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항상 신기술 영역을 쫓아가는 입장에서 완벽을 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정보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본질인 경영 비용의 절감 내지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보다는 기술적 구사에 치중을 두어 왔던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행적 기술전략의 수립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후자의 문제해결 초점은 경영의 본질인 이윤추구의 이해에 바탕을 둔 정보기술 적용 안목을 갖춘 인재의 양성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정보산업 육성 정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의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그간 정부가 많은 정책시행 및 예산의 지원으로 정보산업의 육성을 선도해 왔지만 그래도 보완되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다. 사실 기업에서 불확실한 것을 대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연구개발은 정부가 담당하고 관련 예산의 대폭적 증액을 권하고 싶다. 혹시 예산의 제약이 따른다면 그것은 국공채의 발행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혹여 재정적자를 우려한다면 근본적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싶다. 이유는 국공채의 상환이자가 재정적자의 요인일 것이지만 그것이 내국인에게 한정된다면 그리 염려할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 재정은 꼭 흑자이어야 된다는 사고는 국가 경제발전의 필수요소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결과로 기업과 가계가 튼튼해 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 경제를 살찌우는 길이 아닐까 싶다.

두 번째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보화의 영역을 대폭 민간에게 이양하기를 권하고 싶다. 물론 이의 실행에는 많은 성숙된 선행조건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민간기업이 육성되는 길이라면 마땅히 지향되어야 할 정책이 아닐까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차원에서의 정보산업 인력양성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한다. 지금처럼 입시위주의 교육환경하에서는 창의적 정보산업 인력양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규과목의 편제 및 교육환경의 구성에 중점을 두어야 그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